



LEGAL UPDATE
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6-2호

Apr. 2026

기타 정책 동향

- 금융회사 정보보호·개인정보 규제 변화 -

❖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상한이 인상되고 CPO 및 CISO의 역할 등이 강화될 예정

1. 주요 내용

[1]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(26.9.11. 시행)

- (징벌적 과징금) 3년 내 고의중과실 반복, 1천만 명 이상 피해 등 발생 시 **전체 매출액의 10%까지**(기존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%) 과징금 부과 가능해짐
- (CEO-CPO 책임 강화) CEO를 개인정보 처리의 **최종 책임자**로 명시하고,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**CPO 변경** 시 이사회 의결 및 개인정보위 신고를 의무화함
- (통지 및 인증 강화) 개인정보 유출 '가능성'만 인지해도 정보주체에 **통지**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며(기존에는 유출 '확인' 시),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**ISMS-P 인증이 의무화**됨

[2] 정보통신망법 개정사항 (26.10.1. 시행)

- (CISO 임원급 격상 및 위원회 설치) CISO를 **상법상 임원급**으로 지정해야 하며,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**정보보호위원회 설치**를 의무화함
- (조사 및 제재 강화) 침해 의심 정황만으로 **정부의 직권조사**가 가능해지며, 침해사고 인지 시 **24시간 내 신고**를 의무화함
- (반복사고 과징금) 고의중과실로 5년 내 2회 이상 사고 시 **매출액의 3%까지 과징금** 부과 가능해짐

[3] 금융권 주민등록번호 처리 사전 실태점검 (26.4월~)
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고강도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. 최근 카드사 제재에 이은 후속 성격으로 **제재 연계 가능성이 높을 것**으로 예상

2. 시사점

- **금융회사**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(최대 10%)과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(최대 3%)이 형식적으로 **중첩 적용**될 가능성이 있으므로, 사전에 면밀한 자체점검 및 대응이 긴요